

절전과 전원개발 확충은 국민 모두의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진우



아직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예비전력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원전 3기의 가동 중단사태로 8월 중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등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20% 이상 감축과 전력 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로, 전력수급 경보의 준비·관심단계(예비전력 300만~500만kW)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예비전력 100만~300만kW)에서는 냉방 가동의 전면 중단 및 긴급절전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당국이 예상하는 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7,870만kW, 공급능력은 7,672만kW로 피크 때 예비전력이 -198만kW까지 하락될 전망이다. 전력 비상은 여름철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용량 발전기가 불시에 고장이라도 나는 경우에 계획정전이 불가피하고, 대응이 미숙할 경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만 과거 순환정전 경험을 통해 절전의 불가피성을 모두가 인식할 때다. 모두가 절전의 생활화, 즉 실천이다. 특히 전력수요가 최대를 올라가는 오후 2~4시가 중요하다. 고강도의 수요관리와 전기 절약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전력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맞이한 전력위기를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한 사례나 우리가 지난해 6월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에서 500만kW 상당의 전력을 절감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행태와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상당기간 전력수요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설비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지만 부족한 발전용량을 하루아침에 보충할 수는 없다. 발전소 건설에 원자력은 10년 이상, 석탄발전소는 5~6년, 가스발전소도 2~3년은 걸린다. 따라서 전력수급계획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원자력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찬반논리에 집착하거나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급 안정뿐만 아니라 발전원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 공급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전력수급 비상상황이 매일 일상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절약의 생활화가 절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최적의 전원 확대가 요구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력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는 국민적 저력이 절실한 때다.